

##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출범

- 형사사법제도 개선 및 선진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

- 법무부는 7. 22.(월)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사법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의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최근 형사사법 시스템의 급격한 변경으로 인하여 수사·재판 지연 등의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범죄가 조직화·국제화되는 한편, 사회 제 분야에 고도의 정보화가 진행되었음에도, 형사사법제도는 변화된 범죄환경이나 증거방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여러 방면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 이에 법무부는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헌법·형사사법 전문가인 강일원 전(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자(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 현재 학계와 실무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초로 국민을 위한 최적의 선진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박성재 장관은 위촉식에서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을 거치며 범죄 대응 역량은 약화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지연된 수사와 재판으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가장 만족하실 만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엇인지 이를 충분히 고민하여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 형사사법 제도의 진정한 개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위촉식 후 개최된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방안과 계획 등 기본사항은 물론 수사권 조정 등 최근의 형사사법 시스템 변경 이후 발생한 실무상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우선 확인된 기초 통계를 공개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향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그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사법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경청하여, 인권보장·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별첨 :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명단, 수사·재판 지연 관련 통계

|       |              |     |    |                    |
|-------|--------------|-----|----|--------------------|
| 담당 부서 | 검찰국<br>형사법제과 | 책임자 | 과장 | 한상형 (02-2110-3560) |
|       |              | 담당자 | 검사 | 이정아 (02-2110-3564) |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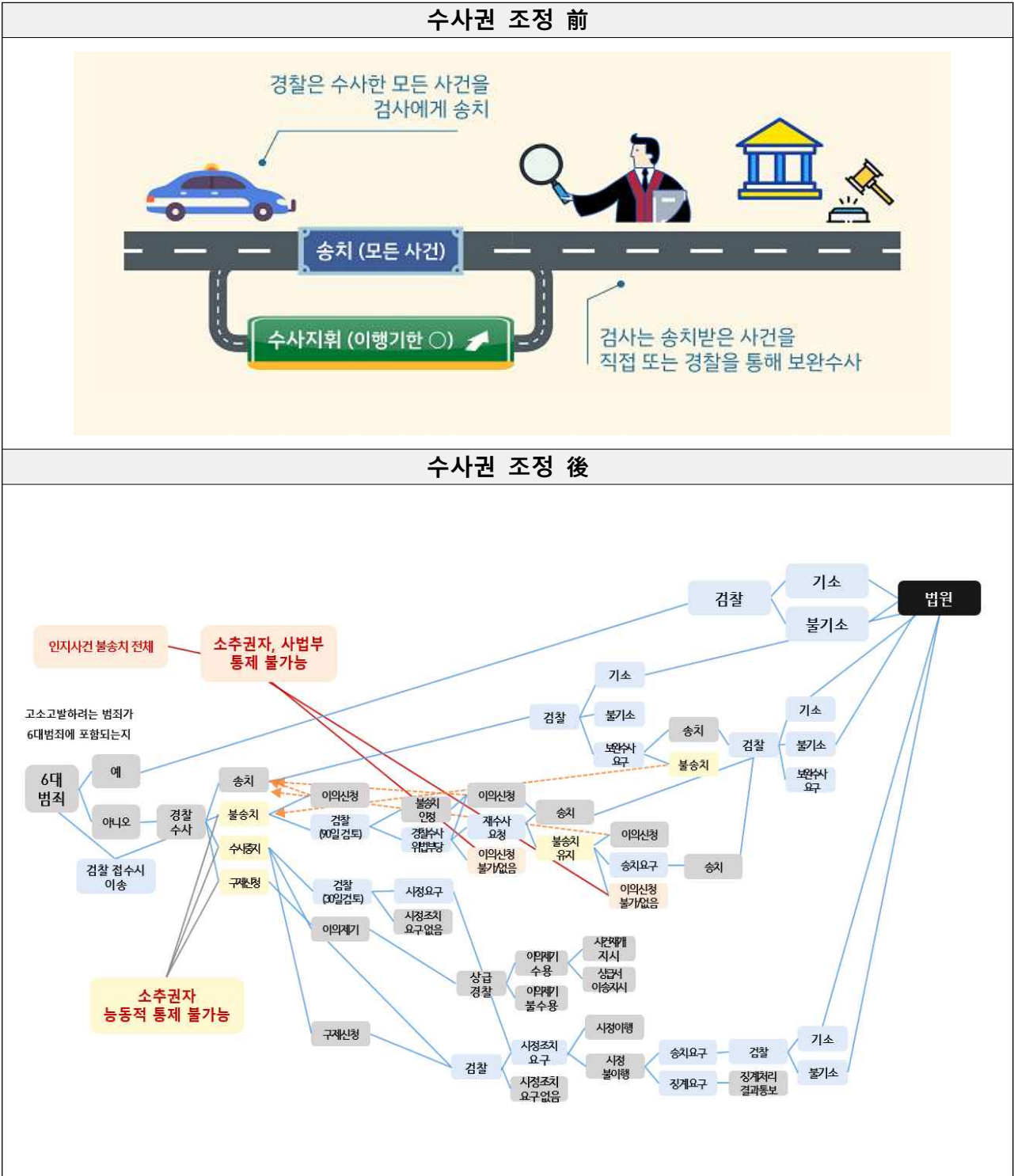


**붙임****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

| 구분   | 성명  | 비고                       |
|------|-----|--------------------------|
| 위원장  | 강일원 | 강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
| 소위원장 | 김성룡 | 경북대학교 교수                 |
|      | 김희균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 선임위원 | 이인호 | 중앙대학교 교수                 |
|      | 이효원 | 서울대학교 교수                 |
| 위원   | 김승현 |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서울변회 추천)   |
|      | 김응재 | 서울대학교 교수                 |
|      | 김종근 |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법원행정처 추천) |
|      | 도규엽 | 상지대학교 교수                 |
|      | 박규형 |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대검찰청 추천)    |
|      | 이경열 | 성균관대학교 교수                |
|      | 이순옥 | 중앙대학교 교수                 |
|      | 이순옥 | 전남대학교 교수                 |
|      | 이우영 | 서울대학교 교수                 |
|      | 이원상 | 조선대학교 교수                 |
|      | 이정민 | 단국대학교 교수                 |
|      | 이창온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      | 이태한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대한변협 추천)     |
|      | 전무곤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대검찰청 추천)     |
|      | 정종현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      | 차진아 | 고려대학교 교수                 |
|      | 최병석 | 법무법인 우경 변호사(대한변협 추천)     |
|      | 최준혁 | 인하대학교 교수                 |

1 수사권 조정 전·후 사건 처리 개요

○ '21년 수사권 조정으로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절차



## ② 수사 지연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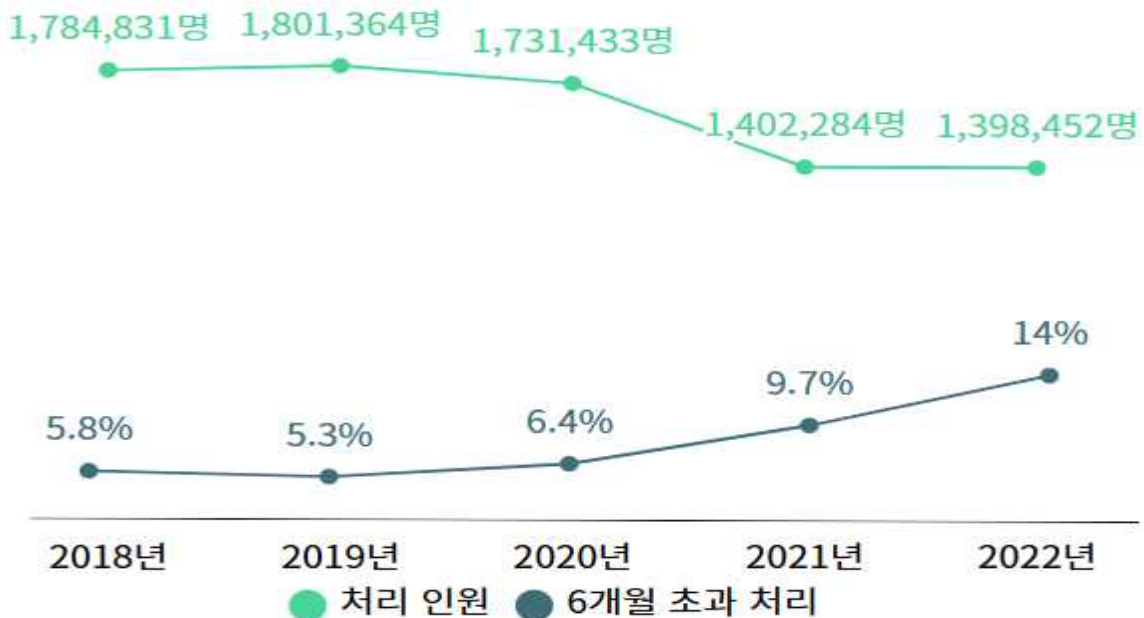
- [장기미제 증가] 전체 범죄사건은 감소하였음에도 장기미제 급증

【KOSIS(국가통계포털) 범죄사건 처리기간 통계】

| 연도   | 경찰 범죄사건 처리 기간 |                |
|------|---------------|----------------|
|      | 전체            | 6개월 초과         |
| 2018 | 1,784,831     | 104,291(5.8%)  |
| 2019 | 1,801,364     | 95,706(5.3%)   |
| 2020 | 1,731,433     | 112,326(6.4%)  |
| 2021 | 1,402,284     | 136,235(9.7%)  |
| 2022 | 1,398,452     | 195,889(14.0%) |

- 170~180만 건대를 유지하던 전체 사건 수는 '20~'21년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140만 건대 안팎으로 감소
- 수사권조정 이후 5~6% 선이던 경찰의 6개월 초과 사건은 9%, 14%로 급증

경찰 범죄사건 처리 및 6개월 초과 처리 비율 통계(2018.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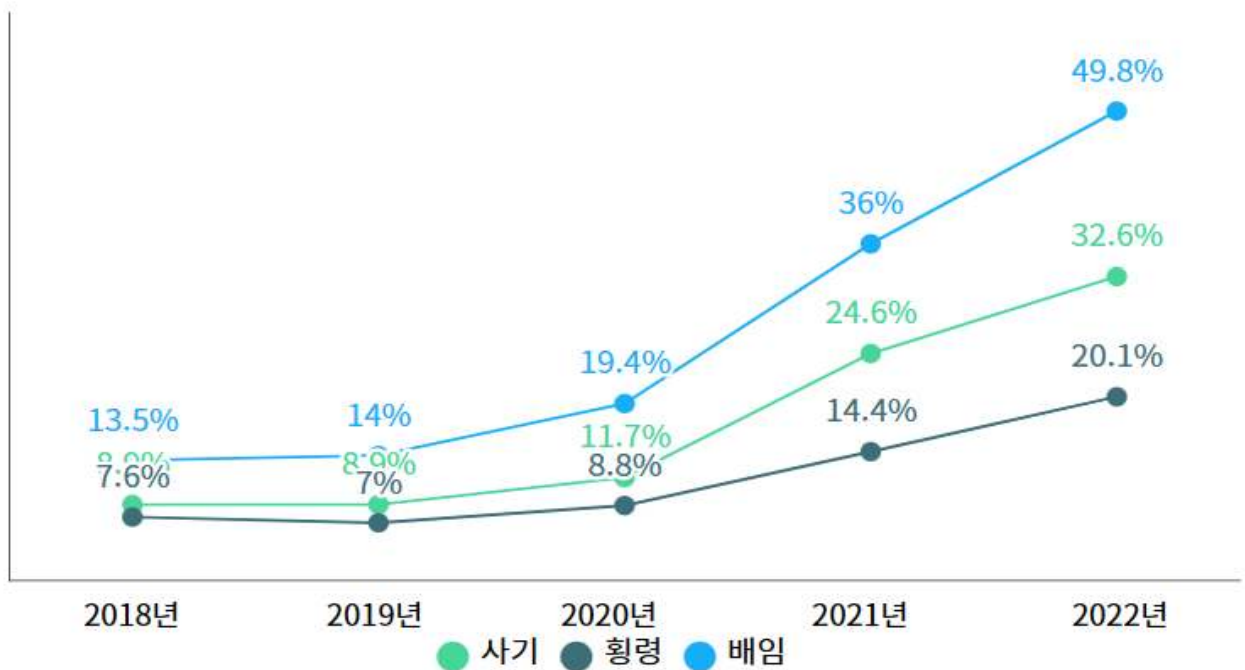


-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난이도가 높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지연이 매우 뚜렷

| 연도   |    | 경찰 범죄사건 처리기간 |               |
|------|----|--------------|---------------|
|      |    | 전체           | 6개월 초과        |
| 2018 | 사기 | 323,474      | 29,084(8.9%)  |
|      | 횡령 | 38,989       | 2,980(7.6%)   |
|      | 배임 | 9,568        | 1,294(13.5%)  |
| 2019 | 사기 | 358,436      | 31,994(8.9%)  |
|      | 횡령 | 39,352       | 2,782(7.0%)   |
|      | 배임 | 9,606        | 1,353(14.0%)  |
| 2020 | 사기 | 375,963      | 44,238(11.7%) |
|      | 횡령 | 40,068       | 3,527(8.8%)   |
|      | 배임 | 9,418        | 1,836(19.4%)  |
| 2021 | 사기 | 235,160      | 57,892(24.6%) |
|      | 횡령 | 30,542       | 4,401(14.4%)  |
|      | 배임 | 6,749        | 2,431(36.0%)  |
| 2022 | 사기 | 228,531      | 74,661(32.6%) |
|      | 횡령 | 33,055       | 6,659(20.1%)  |
|      | 배임 | 6,770        | 3,375(49.8%)  |

- 복잡한 법리 판단을 요하는 배임 사건의 경우,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 사건이 10%대에 불과하였으나, 수사권조정 이후 36%에서 50%선까지 급증

경찰 재산범죄 사건 6개월 초과 처리(2018. ~ 2022.)



○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사건 처리 장기화]

- 사경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사건의 3개월 이상 초과 이행 사건 비율이 40% ~ 60%선으로 최초 송치 후 장기화 경향

[사경의 보완수사 소요기간 (단위 : 건)]

| 구분 \ 소요기간   | 1개월 이하        | 1~3개월         | 3~6개월             | 6개월 초과 및 미이행  |
|-------------|---------------|---------------|-------------------|---------------|
| '21년 상반기 요구 | 18,928(26.2%) | 21,856(30.3%) | 13,796(19.1%)     | 17,643(24.4%) |
|             |               |               | 3개월 초과 처리 총 43.5% |               |
| '21년 하반기 요구 | 15,476(24.5%) | 17,911(28.4%) | 12,777(20.3%)     | 16,922(26.8%) |
|             |               |               | 3개월 초과 처리 총 47.1% |               |
| '22년 상반기 요구 | 13,882(24.7%) | 16,671(29.6%) | 11,690(20.8%)     | 14,032(24.9%) |
|             |               |               | 3개월 초과 처리 총 45.7% |               |
| '22년 하반기 요구 | 15,091(26.9%) | 16,741(29.8%) | 12,714(22.6%)     | 11,621(20.7%) |
|             |               |               | 3개월 초과 처리 총 43.3% |               |
| '23년 상반기 요구 | 14,354(28.4%) | 15,845(31.4%) | 11,607(23.0%)     | 8,712(17.2%)  |
|             |               |               | 3개월 초과 처리 총 40.2% |               |
| '23년 하반기 요구 | 15,049(27.3%) | 19,032(34.5%) | 13,757(24.9%)     | 7,365(13.3%)  |
|             |               |               | 3개월 초과 처리 총 38.2% |               |

[사경의 재수사 소요기간 (단위 : 건)]

| 구분 \ 소요기간   | 1개월 이하       | 1~3개월        | 3~6개월          | 6개월 초과 및 미이행 |
|-------------|--------------|--------------|----------------|--------------|
| '21년 상반기 요구 | 1,609(24.4%) | 1,687(25.6%) | 980(14.9%)     | 2,307(35.0%) |
|             |              |              | 3개월 초과 총 49.9% |              |
| '21년 하반기 요구 | 1,451(18.6%) | 1,679(21.5%) | 1,338(17.1%)   | 3,351(42.9%) |
|             |              |              | 3개월 초과 총 60.0% |              |
| '22년 상반기 요구 | 1,366(18.7%) | 1,739(23.8%) | 1,533(21.0%)   | 2,669(36.5%) |
|             |              |              | 3개월 초과 총 57.5% |              |
| '22년 하반기 요구 | 1,455(22.0%) | 1,657(25.0%) | 1,559(23.6%)   | 1,948(29.4%) |
|             |              |              | 3개월 초과 총 53.0% |              |
| '23년 상반기 요구 | 1,529(23.2%) | 1,689(25.6%) | 1,409(21.3%)   | 1,977(29.9%) |
|             |              |              | 3개월 초과 총 51.2% |              |
| '23년 하반기 요구 | 1,359(23.2%) | 1,612(27.5%) | 1,343(22.9%)   | 1,551(26.4%) |
|             |              |              | 3개월 초과 총 49.3% |              |

※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등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현재는 사건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한 사건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최종 소요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사건 송치 후에도 상당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사건지연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24년 하반기 차세대 KICS에 사건번호 추적성 확보 시스템 구축 예정으로, 이후에는 최종 소요기간도 추적 가능할 것으로 예상)

### 3 재판 지연 통계

#### ○ 재판 기간 증가

- '22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의하면, 형사합의부 기준 사건 접수일 부터 1심 선고까지 걸리는 처리기간은 평균 6.8개월이고, '20년 5.9개월, '21년 6.6개월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
- 지방법원 항소심의 경우, 선고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20년 6.0개월, '21년 6.3개월, '22년 7.2개월로 1심 재판보다 더 장기화

#### ○ 형사공판사건 접수일부터 1회 기일까지 소요일수 증가

| 연도   | 접수 ~ 1회 기일 소요일수(일) <sup>1)</sup> |      |      |      |      |      |        |       |
|------|----------------------------------|------|------|------|------|------|--------|-------|
|      | 형사합의                             |      | 형사단독 |      | 고등법원 |      | 지법 항소부 |       |
|      | 구속                               | 불구속  | 구속   | 불구속  | 구속   | 불구속  | 구속     | 불구속   |
| 2018 | 27.5                             | 43.6 | 23.0 | 52.9 | 55.3 | 91.2 | 44.9   | 119.0 |
| 2019 | 28.9                             | 47.1 | 24.7 | 58.1 | 58.9 | 87.5 | 49.6   | 135.5 |
| 2020 | 32.0                             | 55.1 | 26.7 | 73.9 | 56.8 | 89.6 | 53.7   | 176.4 |
| 2021 | 35.3                             | 68.4 | 30.6 | 83.6 | 58.9 | 92.6 | 55.5   | 189.4 |

1) 법원전산정보관리국 2022. 8. 8.자 전산자료(김윤선,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3-02, 2023, 182면에서 인용)